



아이티의 눈물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한 고아원. 지진 참사로 부모를 잃은 한 아이가 눈을 짓고 있다.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이번 지진참사로 10만명 가량이었던 아이티 고아의 수가 크게 증가한 만큼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남뉴스

6·2 지방선거 민주당 광주시장 시민배심원제 '컷 오프' 논란 왜

'유·불리 섹법' 후보마다 제각각

"난립후보 압축해야" "무슨 기준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도입하기로 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놓고 후보 간 눈치 보기가 한창이다. 특히 광주시장 후보 압축(컷오프) 과정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난달 31일 공식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를 둘러싼 후보 간 논란이 확산할 조짐이다.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공천방식과 관련, "7명이나 되는 잠정 후보에 대한 판단을 시민에게 맡기는 것은 정당의 책임 회피"라며 "전문성 있는 인물과 지역대표로 배심원을 구성해 참신성, 시정 운영능력, 도덕성, 당 기여도를 검증해 3명으로 후보를 1차 압축한 뒤 2차로 당원과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 경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장후보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컷오프 방식으로 도입하자는 이야기는 당 지도부에서 몇 차례 제기됐으나 후보가 이를 공식 제기한 것은 처음이어서 후보 간 유·불리 공방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시민공천배심원제에 대해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강운태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 광주시장 경선 후보들은 찬성 입장이었다. 이를 컷오프 과정에 도입하자는 견해에 대해서도 비슷한 양상이다.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최종 후보 결정으로 치를 경우 200명의 배심원단이 광주시장 후보를 선정할 수 있다는 대표성 논란이 일고 중앙당으로선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반대 목소리가 컸지만 컷오프 방식으로 도입하면 취지도 살리고

반대 목소리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 도입 주장의 근거였다. 여론조사에 뒤지는 후보 입장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통해 기존 선거 판도를 뒤집을 수 있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후보는 선불리 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선거관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중앙당이 일부 후보를 배제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강운태 의원은 이날 "컷오프는 복잡하지만 할 뿐 실익도 의미도 없다"며 "불필요한 오해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광주 정치권에서는 중앙당이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면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할 경우 여론조사 선두권 인사가 후보 압축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민주당원 사이에는 시민배심원제에 대해 '중앙 전문배심원이 도대체 누구데 지방선거 후보를 뽑느냐' '시민사회단체 회이나 비슷한 성향의 인사들을 정치권에 진입시키기 위한 도구 아니냐' '배심원 명단이 미리 셀 가능성은 없느냐' '천여명의 전문가 풀이라면 후보 측에서 충분히 예측해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 등의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혁신과 통합위 소속 이재명 부대변인 "주민배심원은 경선 직전에 무작위 추출해 구성된 후보 경선 당일 공개되므로 중립성과 매수 가능성은 있을 수 없다"며 "전문배심원의 경우도 전문가 집단에 배심원 선정을 위탁한 뒤 선정된 배심원들로 풀을 구성해 경선 직전 무작위 추출할 것이므로 매수 가능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심은 기우"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선위해 의원직 버리기에는...

시·도지사 출마 국회의원 사퇴 주저...낙선땐 보선 참여도 못해

2일부터 광주시·전남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의 배수진을 치는 사례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상 현역의원이 시·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지만, 의원직 사퇴 후 경선에 도전했다가 탈락할 경우 상당기간 정치적 휴식기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법이 개정돼 의원직을 사퇴한 후보자가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 참여금지' 규정까지 적용돼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졌다. 여기에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경선 룰도 의원직 사퇴를 꺼리는 이유다. 당원이 포함되는 국민참여 경선 도입시, 현역 의원이 아닐 경우 당원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료 국회의원들의 지원에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광주시와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의원들은 예비 후보 등록에 손사래를 치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광산 을)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의 뜻을 물어 사퇴를 결정하는 것은 당면하지만, 상대 후보의 정치적 공세에

밀려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본선이 아닌 당내 경선을 위해 의원직을 버리는 것은 뽑아준 유권자들의 뜻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도 이날 도당위원장 사임 기자회견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직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생관련 법안과 세종시 특별법 제정 등 산적해 있는 정국 현안 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당과 협의를 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차제에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의원직 사퇴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쟁 후보들과 일부 시민단체가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어 현역-경쟁 후보 간 치열한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석영 전 함평군수와 정동재 전 장관, 양형일 전 국회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합법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미룬 채 현 단계조직 및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처신"이라고 맹비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6·2 지방선거 주요 일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일 정	실시 사항
2월 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광주시장, 전남지사 및 광주시교육감, 전남도교육감)
2월 1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광주시의원, 전남도의원, 광주 구의원, 광주지역 구청장, 전남지역 시장)
3월 4일까지	합동예비군 소대장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장이 거시무관 개차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3월 4일~6월 2일	의정활동 보고 금지
3월 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전남지역 군수, 군의원)
5월 13~14일	후보자 등록 신청(매일 오전 9시~오후 5시)
5월 14~18일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 신고인명부 작성
5월 20일	선거기간 개시일
5월 21일까지	선거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5월 23일까지	선거벽보 첨부
5월 24일까지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부재자 투표용지 발송
5월 26일	선거인명부 확정
5월 27~28일	부재자 투표소 투표
5월 28일까지	개표소 공개
6월 2일	투표(오전 6시~오후 6시) 및 개표

시민공천배심원제 절충안 도입?

광주 국회의원들 내일 회동 지방선거 공천방식 논의

광주 국회의원들이 1~2일 국회에서 만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여부를 6월 지방선거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동 결과에 따라 민주당 광주시장 및 구청장 후보 경선에서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여부 등 경선 룰에 대한 방향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광주시장위원장인 김동철 의원은 지난달 31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시장 후보와 구청장 후보 공천을 위해 시민배심원제를 후보압축(컷-오프) 형태로 도입하는 문제 등 지방선거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광주시장 경선 출마 선언을 한 강운태, 이용섭 의원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이 1일 오후 3시 1차로 모

임을 가진데 이어 2일 오전 9시 후보를 포함, 8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 2차 모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의원은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 결과는 최종 공천방식 결정에 앞서 민주당 중앙당에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광주 국회의원 등 광주시장과구의 소통과 중앙당 공심위의 검토를 거쳐 광주지역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동에서 광주 국회의원들이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부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광주시장 및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광주 국회의원 가운데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강기정, 이용섭 의원 등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이날 논의는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김동철 의원 등은 시민공천배심원제를 경선 컷-오프 방식으로 도입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대한 광주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수차례 회동이 이뤄진 이후, 광주 국회의원들의 입장일 정리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대학선택도 전략이다

자기개발 전략파트너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0학년도 신·편입생 추가모집

2010. 1. 30(토) ~ 2. 6(토)

- 국가인재 DB 등재인물 출신대학 4위
- 고위공무원 출신대학 5위

광주 전남 지역 대학 | 062)973-5100

한국방송통신대학교